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61
----------	-------

발의연월일 : 2022. 7. 7.

발 의 자 : 윤영찬 · 이원욱 · 이용빈
강병원 · 임호선 · 박광온
조승래 · 한준호 · 전해숙
김영진 · 최인호 · 이장섭
정필모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중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를 “등록·공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 행위 등의 제재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⑥ (생략)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u>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u>	⑦ ----- ----- ----- <u>등록·공개</u> <u>하여야</u>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